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8.

발 의 자 : 이탄희 · 홍정민 · 윤건영
윤영덕 · 김한규 · 최강욱
박주민 · 권칠승 · 이용선
장경태 · 박완주 · 강민정
김상희 · 이형석 · 임호선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.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가해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수신 거부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.

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이와 함께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, 2개월에 불과해

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, 긴급응급조치와 잠정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다목, 제3조제1호, 제5조제6항, 제8조제4항, 제9조제5항 단서,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).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“도달”을 “도달(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경고”를 “서면경고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제5항 단서 중 “두 차례”를 “세 차례”로, “2개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스톱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

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
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.

제17조의3(통지)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·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·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,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·형집행정지·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(身柄)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

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제6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스토킹 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<u>도달</u> 하게 하는 행위	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달(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)</u> ----- -----

<p>라.·마. (생 략)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)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스톱킹행위의 제지,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<u>경고</u>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 ① ~ ⑤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~ ③ (생 략)</p>	<p>라.·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u>서면경고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신 설>

제9조(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) ① ~ ④ (생략)

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. -----

-----세 차례-----
-----3개월-----
-----.

제17조의2(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스톱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
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

<신 설>

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
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.

제17조의3(통지) 검사 또는 사법
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
의 체포·구속 및 석방과 관련
된 사법경찰관·검사 및 법원의
처분 내용, 재판선고기일이나
선고 내용 및 가석방·형집행정
지·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
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
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
재판 및 신병(身柄)에 관련된
변동 상황을 피해자 및 그 법
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